

보건복지 ISSUE & FOCUS

제462호 (2026-03)



발행인 신영석 발행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0147) 세종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1~5층)
T 044)287-8000 F 044)287-8052 발행일 2026. 3. 19. ISSN 2092-7117

사람들은 왜 불평등이 심하다고 느낄까? - 주관적 불평등 결정 요인과 정책적 개입 방안 -

고혜진

사회보장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

- 이 글에서는 소득 분배 지표 개선에도 불구하고 주관적 불평등이 악화하는 원인을 소득 이외의 다른 경제적 자원 분배 악화에서 찾아보고자 함.
- 한국복지패널 2차부터 17차까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람들이 분배의 개선을 체감하지 못하는 데는 생활비 부담과 자산 불평등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함.
- 특히 자산 불평등의 심화는 소득 불평등의 개선을 체감하지 못하게 되는 주요 원인으로 보이고, 저소득층에게는 소득 수준 자체보다 생활비를 감당할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것이 분배 개선을 체감하지 못하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이 글에서는 가계 경제의 유동성 확보를 지원하고 자산 축적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의 정책적 개입이 필요함을 지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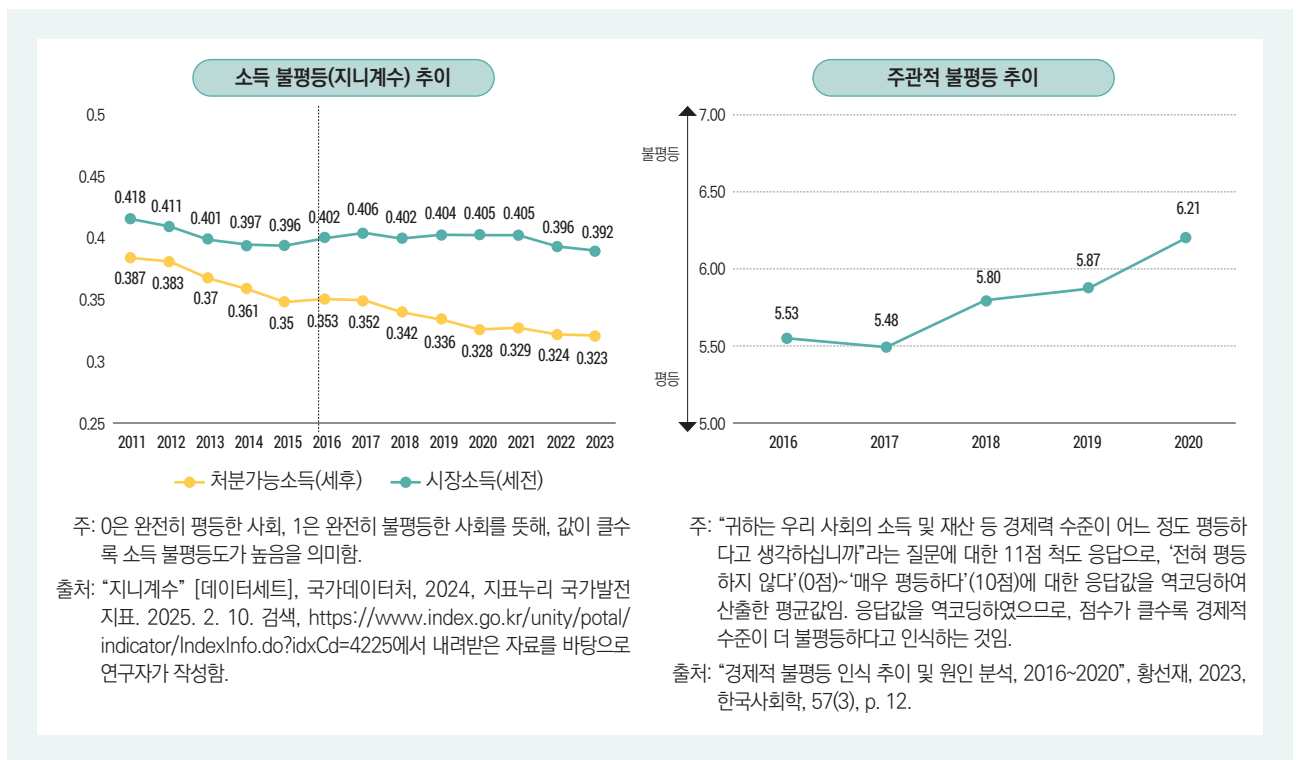
01. 실질 소득 분배 개선과 불평등 인식 악화 현황

◆ 최근 10여 년간 공적이전소득 확대로 소득 분배 지표가 꾸준히 개선되었으나, 불평등에 대한 인식은 악화하고 있음.

- 2025년 말 발표된 국가데이터처의 2024년 소득 불평등(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계수) 지표는 전년 대비 다소 악화하였으나, 2010년대 들어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불평등은 개선되어 왔음.
 - [그림 1]의 왼쪽과 같이, 공적이전소득 확대에 힘입어 우리 사회의 공식적인 소득 불평등 지표는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임(여유진, 2021; 이원진 외, 2021).

- 그러나 국민들은 불평등이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심지어 더 심화하고 있다고 느끼는 등 분배의 개선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그림 1]의 오른쪽과 같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우리 사회에서는 소득 및 자산이 불평등하다는 인식이 뚜렷하게 강화되고 있음(황선재, 2023).
 - 전반적인 불평등도뿐 아니라 소득 격차도 줄어들고 있지만, 우리 국민의 80% 이상은 지난 10여 년간 줄곧 소득 격차가 크다고 인식했음(조돈문, 2023, p. 8).
 - 선행 연구에 따르면 분배 지표 개선이 이어졌던, 2018년 전후에도 국민의 약 85%는 소득 격차가 크다고 보았으며(정해식 외, 2018), 2024년에도 소득 격차가 크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90% 이상에 달함(정세정 외, 2024).

[그림 1] 실질 소득 분배와 주관적 불평등의 추이



◆ 이 글에서는 주관적 불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분배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정책적 개입 방안을 제시함.

- 한국복지패널 2차(2007년)부터 17차(2021년)까지의 자료를 활용한 패널회귀분석(확률효과)을 통해, 소득 이외의 다른 경제적 자원이 주관적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함.
 - 이때의 주관적 불평등은 소득·자산의 불평등과 소득 격차에 대한 응답으로, 응답값이 클수록 불평등이 심하다고 인식하는 것임.¹⁾
 - 분석 모형에서는 개인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속성, 나이, 성별, 교육 수준, 혼인 상태, 취업 여부, 건강 상태를 통제함.

1) 전자는 “우리나라는 소득이나 재산에 있어서 얼마나 평등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에 ‘매우 평등하다’(1점)~‘매우 불평등하다’(7점)의 7점 척도로 응답한 값임. 후자는 “우리나라의 소득 격차가 너무 크다”라는 문항에 대한 동의 정도로, 원래 응답값을 역코딩하여 ‘매우 반대한다’(1점)~‘매우 동의한다’(5점)로 구성한 값임.

02. 소득이 주관적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 <표 1>과 같이,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분배 상태가 더 불평등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음.

-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이 심하다는 문항이나 소득 격차가 크다는 문항에 대한 동의 정도는 소득 수준 증가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부적 관계를 보임.
- 이러한 영향은 소득 집단별로 세분화하여 살펴볼 때 두드러져, 소득 분위가 낮은 사람들이 소득과 자산이 더 불평등하고 소득 격차도 크다고 인식함.
 - 소득 분위 내에서도 저소득 집단과 중하위 중간소득 집단에서 불평등이 심각하다고 느낌.
 - 중위 중간소득, 상위 중간소득자들은 고소득층과 비교해 불평등 수준에 대한 인식 차이가 뚜렷하지 않지만, 하위 중간소득자들은 저소득층과 마찬가지로 불평등이 심각하다고 느낌.
- 저소득층 중심으로 소득보장제도가 확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들은 평균적으로 우리 사회의 경제적 불평등을 더 심각하게 느끼고 있음.
- 중간 소득자 내에서도 하위 중간 소득자들은 시장소득 증가가 정체된 상황에서 공적이전도 충분하지 않아, 분배의 개선을 체감하지 못할 수 있음.
 - OECD(2019)는 사회보장제도가 확충되고 그 영향이 중산층(middle class)으로 확대되어 이들의 경제적 상황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였다고 평가하나(pp. 41, 67-68), 중산층은 세 부담에 비해 사회보장 혜택이 적은 편임(pp. 63-64).
- 다만, 소득 격차에 대한 인식과 달리 가처분소득에 대해서는 절대 수준이 높아진다고 해서, 소득이나 자산의 분포가 불평등하다는 인식이 유의미하게 강해지지는 않음.

〈표 1〉 가처분소득과 주관적 불평등

변수		소득·자산이 불평등하다	소득 격차가 크다
모형 1	균등화 가처분소득	-0.003 (0.002)	-0.004*** (0.001)
모형 1-1	기준: 균등화 가처분소득 10분위		
	1분위	0.243*** (0.067)	0.175*** (0.039)
	2분위	0.162** (0.062)	0.167*** (0.035)
	3분위	0.186*** (0.054)	0.214*** (0.031)
	4분위	0.214*** (0.048)	0.215*** (0.027)
	5분위	0.154*** (0.046)	0.122*** (0.026)
	6분위	0.164*** (0.045)	0.127*** (0.025)
	7분위	0.183*** (0.042)	0.140*** (0.024)
	8분위	0.0871* (0.041)	0.118*** (0.023)
	9분위	0.062 (0.039)	0.099*** (0.022)
모형 2	기준: 고소득(균등화 중위소득 200% 이상)		
	저소득(균등화 중위소득 75% 미만)	0.195*** (0.047)	0.177*** (0.027)
	중간소득(균등화 중위소득 75% 이상~200% 미만)	0.0949* (0.042)	0.110*** (0.024)
모형 2-1	기준: 고소득(균등화 중위소득 200% 이상)		
	저소득(균등화 중위소득 75% 미만)	0.206*** (0.048)	0.187*** (0.027)
	하위 중간소득(균등화 중위소득 75% 이상~100% 미만)	0.154** (0.048)	0.155*** (0.027)
	중위 중간소득(균등화 중위소득 100% 이상~150% 미만)	0.084 (0.044)	0.118*** (0.025)
	상위 중간소득(균등화 중위소득 150% 이상~200% 미만)	0.062 (0.048)	0.047 (0.028)

주: OECD(2019)에 따라, 중간소득 가구는 가구의 균등화 가처분 소득이 균등화 중위소득의 75% 이상~200% 미만인 가구임. 중간소득 가구를 세분화하면, 하위 중간소득 가구는 가구의 균등화 가처분소득이 균등화 중위소득의 75% 이상~100% 미만, 중위 중간소득 가구는 가구의 균등화 가처분소득이 균등화 중위소득의 100% 이상~150% 미만, 상위 중간소득 가구는 가구의 균등화 가처분소득이 균등화 중위소득의 150% 이상~200% 미만인 가구임.

괄호 안은 표준오차임.

* p<0.05, ** p<0.01, *** p<0.001

출처: "한국복지패널 2007(2차), 2010(5차), 2013(8차), 2016(11차), 2019(14차), 2021(17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자료에 개인 종단 표본 가중치를 적용하여 연구자가 작성함.

03. 소득 이외 경제적 자원이 주관적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가. 지출 부담과 주관적 불평등

◆ 소득 하위 집단은 생활비 부담으로 인해 경제적 불평등이 심해지고 있다고 느낄 수 있음.

- 소비 지출로 인한 부담은 소득 하위 집단에 집중됨.
 - <표 2>와 같이, 소비 지출 후 남는 소득(잔여 소득)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소비 지출 차감 후의 소득이 0 미만인 사람)은 소득 1분위에서만 관찰됨.
 - 또한 [그림 2]와 같이, 소득 수준에 따른 식료품비 지출 격차가 줄어들면서 저소득층의 식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증가하였을 수 있음.
 - 식비 부담이 경상소득의 20%를 초과하는 사람은 전 소득 집단에서 나타나나,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그 비율이 낮아져, 상대적으로 소득 대비 식비 부담이 큰 경우도 소득 하위 분위에 집중됨.

〈표 2〉 소득 분위별 지출 부담 분포

(단위: %)

소득 분위	불충분한 소득 비율	높은 식비 지출 부담자의 비율
소득 1분위	6.1	93.3
소득 2분위	-	93.0
소득 3분위	-	86.6
소득 4분위	-	75.3
소득 5분위	-	63.0
소득 6분위	-	52.9
소득 7분위	-	40.3
소득 8분위	-	25.8
소득 9분위	-	12.2
소득 10분위	-	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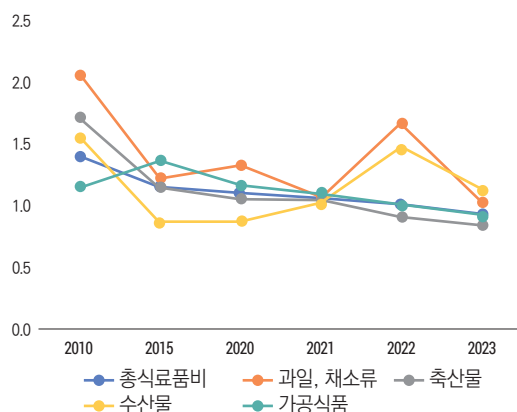
주: 1) 불충분한 소득은 경상소득에서 소비 지출을 제한 값이 0 미만인 경우를 1로, 0을 초과하는 경우를 0으로 하여 산출한 값임.

2) 높은 식비 지출은 식비 지출이 경상소득의 20%를 초과하는 경우를 1로, 20% 이하인 경우를 0으로 하여 산출한 값임.

출처: “한국복지패널 2007(2차), 2010(5차), 2013(8차), 2016(11차), 2019(14차), 2021(17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자료에 개인 종단 표본 가중치를 적용하여 연구자가 작성함.

[그림 2] 고소득 가구 대비 저소득 가구의 식료품비 지출 수준(3인 가구)

(단위: 배)



주: 1) 월평균 소득 750만 원 이상 가구의 품목별 지출 대비 200만 ~299만 원 가구의 지출 수준임.

2) 연도별 3인 가구 중 소득이 200만 원 미만인 경우는 10가구 미만이므로 이는 제외함.

출처: “농식품 소비정보 DB 원자료” [미발간 데이터], 농촌진흥청, 각 연도. 농촌진흥청에 별도 신청(공문)하여 받은 자료를 이용해 분석함.

◆ 저소득층에게는 소득 수준 자체보다는 생활비를 감당할 여력이 없는 것이 분배 개선을 체감하지 못하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 <표 3>과 같이, 불충분한 소득과 높은 식비 지출 부담은 주관적 불평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
 - 가처분소득을 추가 투입(<표 3>의 모형 2)하였을 때, 가처분소득의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으나, 지출 부담은 경제적 불평등이 심각하다는 인식에 여전히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요인임.

〈표 3〉 분배 인식과 지출의 관계에 대한 모형

변수		소득·자산이 불평등하다	소득 격차가 크다
모형 1	기준: 잔여 소득이 0 이상 불충분한 소득	0.540* (0.267)	-0.218 (0.145)
	기준: 경상소득의 20% 이하 식비 지출 높은 식비 지출 부담	0.159*** (0.025)	0.114*** (0.013)
모형 1-1	기준: 잔여 소득이 0 이상 불충분한 소득	0.539* (0.238)	-0.271 (0.144)
모형 1-2	기준: 경상소득의 20% 이하 식비 지출 높은 식비 지출 부담	0.157*** (0.025)	0.115*** (0.013)
모형 2	균등화 가처분소득	-0.001 (0.002)	-0.003** (0.001)
	기준: 잔여 소득이 0 이상 불충분한 소득	0.537* (0.267)	-0.236 (0.145)
	기준: 경상소득의 20% 이하 식비 지출 높은 식비 지출 부담	0.158*** (0.025)	0.109*** (0.013)

주: 1) 불충분한 소득은 경상소득에서 소비 지출을 제한 값이 0 미만인 경우를 1로, 0을 초과하는 경우를 0으로 하여 산출한 값임.

2) 높은 식비 지출은 식비 지출이 경상소득의 20%를 초과하는 경우를 1로, 20% 이하인 경우를 0으로 하여 산출한 값임.

괄호 안은 표준오차임.

* $p < 0.05$, ** $p < 0.01$, *** $p < 0.001$

출처: “한국복지패널 2007(2차), 2010(5차), 2013(8차), 2016(11차), 2019(14차), 2021(17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자료에 개인 종단 표본 가중치를 적용하여 연구자가 작성함.

- 〈표 4〉에서 소득 분위별로 나누어 영향을 살펴보면, 소득 하위 분위에서 지출 부담의 영향이 뚜렷하게 나타남.
 - 소득 증가가 분배 인식 개선에 미치는 영향은 중간소득 집단을 중심으로 나타남. 저소득층에서는 소득이 늘어난다고 해서 주관적 불평등 인식이 개선되지는 않음.
 - 생활비 부담의 영향은 저소득층에서 뚜렷하게 나타남. 불충분한 소득은 소득 1분위 가구가 소득·자산 불평등이 심하다고 느끼는 원인이나, 소득 격차 자체가 크다는 인식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식비 지출이 큰 경우는 소득 1분위 저소득층과 하위 중간소득층을 중심으로 분배 상태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음.

〈표 4〉 소득 집단별 분배 인식과 지출의 관계에 대한 모형

집단 구분	소득·자산이 불평등하다					
	균등화 가처분소득		불충분한 소득		높은 식비 지출 부담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소득 1분위	0.070	(0.040)	1.181***	(0.356)	0.681*	(0.291)
저소득 (균등화 중위소득 75% 미만)	-0.049	(0.027)	0.221	(0.259)	0.035	(0.050)
하위 중간소득 (균등화 중위소득 75% 이상~100% 미만)	-0.172**	(0.060)			0.145**	(0.055)
중위 중간소득 (균등화 중위소득 100% 이상~150% 미만)	-0.134***	(0.034)			0.111*	(0.055)
상위 중간소득 (균등화 중위소득 150% 이상~200% 미만)	-0.180***	(0.042)			-0.284	(0.196)
고소득 (균등화 중위소득 200% 이상)	0.001	(0.002)			-0.091	(0.478)

집단 구분	소득 격차가 크다					
	균등화 가처분소득		불충분한 소득		높은 식비 지출 부담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소득 1분위	0.003	(0.020)	-0.291	(0.175)	0.038	(0.141)
저소득 (균등화 중위소득 75% 미만)	-0.014	(0.014)	-0.276*	(0.135)	0.0846**	(0.026)
하위 중간소득 (균등화 중위소득 75% 이상~100% 미만)	-0.067*	(0.032)			0.113***	(0.029)
중위 중간소득 (균등화 중위소득 100% 이상~150% 미만)	-0.041*	(0.019)			0.051	(0.031)
상위 중간소득 (균등화 중위소득 150% 이상~200% 미만)	-0.071**	(0.024)			-0.066	(0.110)
고소득 (균등화 중위소득 200% 이상)	-0.002	(0.001)			0.472	(0.261)

주: OECD(2019)에 따라, 중간소득 가구는 가구의 균등화 가처분 소득이 균등화 중위소득의 75% 이상~200% 미만인 가구임. 중간소득 가구를 세분화하면, 하위 중간소득 가구는 가구의 균등화 가처분소득이 균등화 중위소득의 75% 이상~100% 미만, 중위 중간소득 가구는 가구의 균등화 가처분소득이 균등화 중위소득의 100% 이상~150% 미만, 상위 중간소득 가구는 가구의 균등화 가처분소득이 균등화 중위소득의 150% 이상~200% 미만인 가구임.

1) 불충분한 소득은 경상소득에서 소비 지출을 제한 값이 0 미만인 경우를 1로, 0을 초과하는 경우를 0으로 하여 산출한 값임.

2) 높은 식비 지출은 식비 지출이 경상소득의 20%를 초과하는 경우를 1로, 20% 이하인 경우를 0으로 하여 산출한 값임.

위 표는 각 소득 집단별로 나누어 분석한 것임. 괄호 안은 표준오차임.

* p(0.05), ** p(0.01), *** p(0.001)

출처: “한국복지패널 2007(2차), 2010(5차), 2013(8차), 2016(11차), 2019(14차), 2021(17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자료에 개인 종단 표본 가중치를 적용하여 연구자가 작성함.

나. 자산과 주관적 불평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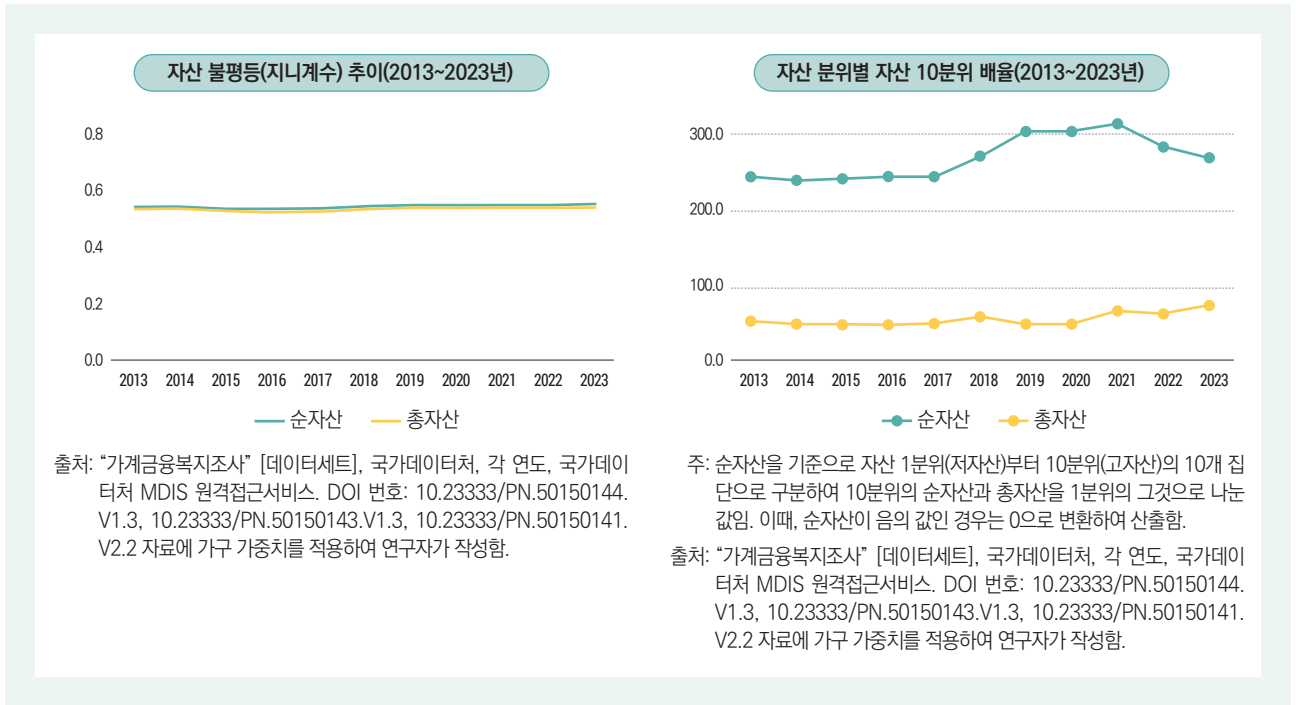
◆ 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이 발간된 이후 불평등 심화의 주요인으로 지목되어 온 자산 불평등이 분배 개선을 체감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일 수 있음.

- 분배 혹은 불평등에 대한 인식을 물을 때, ‘무엇’에 대한 분포 상태를 질문하는 것인지 모호한 데다 설명 ‘소득’ 분배라고 명시하여 질문하더라도 사람들은 소득과 재산을 구분해서 답하기보다 두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가능성이 있음.
 - 소득 불평등(지니계수)이 완화된다고 해서 분배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는 것은 아닌데, 이는 “소득과 재산 같은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인식을 묻는 질문에 답할 때 사람들이 재산을 중점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이라는 것임(황선재, 2023, p. 24).

◆ 2000년대 후반부터 꾸준히 개선돼 온 소득 분배(이성균 외, 2020, pp. 63-68)와 달리, 자산 불평등은 다소 심화하고 있음.

- 자산 보유는 상위층에 집중되기 때문에(Davies & Shorrocks, 2000) 자산 불평등이 소득 불평등보다 심함. 실제로 자산 지니계수는 0.5 수준으로 처분가능소득의 지니계수가 0.3 수준인 것에 비해 높음.
 - 자산 분위에 따른 격차는 코로나19 이전까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며, 총자산을 기준으로 하면 코로나19 이후에도 격차가 커짐.

[그림 3] 자산 분배 추이



◆ <표 5>와 같이, 자산 보유 여부와 보유 규모는 분배 인식을 좌우하는 주된 요인으로 보임.

- 순자산이 많을수록 불평등이나 소득 격차가 덜하다고 느낌.
 - 자산의 영향을 고려할 때, ‘소득’ 격차에 대해 직접 질문할 때는 가처분소득의 증가가 소득 격차가 덜하다고 인식하는 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나, 소득이나 자산의 불평등 수준에 대해서는 소득보다 자산의 영향이 더 분명하게 나타남.
- 또한 <표 5>의 모형 3과 같이, 금융 자산 보유액이 많은 사람이 적은 사람보다, 부동산 자산(자가 보유)을 보유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소득·자산 불평등 및 소득 격차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덜하다고 인식함.

〈표 5〉 분배 인식과 자산의 관계에 대한 모형

변수		소득·자산이 불평등하다	소득 격차가 크다
모형 1	균등화 가처분소득(백만 원)	-0.001 (0.002)	-0.003*** (0.001)
	순자산	-0.019*** (0.003)	-0.006*** (0.001)
모형 2	균등화 가처분소득(백만 원)	-0.002 (0.002)	-0.003** (0.001)
	기준: 순자산 10분위		
	1분위	0.208*** (0.040)	0.158*** (0.022)
	2분위	0.393 (0.291)	0.0378 (0.158)
	3분위	0.146* (0.064)	0.157*** (0.035)
	4분위	0.149** (0.051)	0.0832** (0.029)
	5분위	0.192*** (0.047)	0.139*** (0.027)
	6분위	0.180*** (0.046)	0.063* (0.026)
	7분위	0.0795 (0.046)	0.072** (0.026)
	8분위	0.099* (0.045)	0.0836** (0.025)
	9분위	0.016 (0.044)	0.059* (0.025)
모형 3	균등화 가처분소득(백만 원)	-0.001 (0.002)	-0.003*** (0.001)
	금융 자산 보유액	-0.004*** (0.001)	-0.001** (0.000)
	부동산 자산 보유 여부(자가 여부)	-0.087*** (0.024)	-0.061*** (0.013)

주: 괄호 안은 표준오차임.

* p(0.05, ** p(0.01, *** p(0.001

출처: “한국복지패널 2007(2차), 2010(5차), 2013(8차), 2016(11차), 2019(14차), 2021(17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자료에 개인 종단 표본 가중치를 적용하여 연구자가 작성함.

◆ <표 6>과 같이,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인식에 소득과 자산이 미치는 영향은 소득 수준과 자산의 종류에 따라 상이함.

- 저자산, 저소득 집단에서는 가처분소득이나 금융 자산 보유액이 증가하면 소득·자산 불평등 및 소득 격차가 덜하다고 느끼는 경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만, 부동산 자산(자가 보유)은 저소득 집단의 분배 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저자산, 저소득 가구에서는 위험 상황에 대응할, 현금화가 쉬운 유동 자산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가 가구의 미래 경제적 형편을 가능하는 데 주요하게 작동하여 분배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상위 중간소득 이상 집단은 자가 보유 시 사회를 평등하게 인식하는 한편, 중간소득자들의 경우 자가가 아닌 중위 중간소득 이상 가구(균등화 중위소득 100% 이상~150% 미만)에서 불평등을 더 심각하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 부동산으로 대표되는 특정 자산의 보유가 분배 인식을 좌우할 수 있다는 기존 연구의 지적과 일맥상통함(황선재, 2023, 2025).

〈표 6〉 소득 집단별 분배 인식과 지출의 관계에 대한 모형

집단 구분	소득·자산이 불평등하다					
	균등화 가처분소득		불충분한 소득		높은 식비 지출 부담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자산 1분위	-0.047*	(0.019)	-0.014	(0.010)	-0.089	(0.054)
소득 1분위	0.079*	(0.036)	-0.009*	(0.004)	0.023	(0.083)
저소득 (균등화 중위소득 75% 미만)	-0.083***	(0.023)	-0.007**	(0.002)	-0.042	(0.037)
하위 중간소득 (균등화 중위소득 75% 이상~100% 미만)	-0.214***	(0.051)	-0.006	(0.004)	-0.077	(0.056)
중위 중간소득 (균등화 중위소득 100% 이상~150% 미만)	-0.108***	(0.029)	-0.009***	(0.002)	0.027	(0.048)
상위 중간소득 (균등화 중위소득 150% 이상~200% 미만)	-0.178***	(0.035)	0.000	(0.001)	-0.180*	(0.076)
고소득 (균등화 중위소득 200% 이상)	-0.000	(0.002)	-0.003*	(0.002)	-0.295**	(0.106)
집단 구분	소득 격차가 크다					
	균등화 가처분소득		불충분한 소득		높은 식비 지출 부담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자산 1분위	-0.040***	(0.010)	0.012*	(0.005)	-0.055	(0.029)
소득 1분위	0.026	(0.019)	-0.000	(0.002)	-0.072	(0.046)
저소득 (균등화 중위소득 75% 미만)	-0.006	(0.001)	-0.002	(0.001)	-0.095***	(0.021)
하위 중간소득 (균등화 중위소득 75% 이상~100% 미만)	-0.078*	(0.031)	-0.004*	(0.002)	-0.054	(0.032)
중위 중간소득 (균등화 중위소득 100% 이상~150% 미만)	-0.046*	(0.019)	-0.001	(0.001)	0.055*	(0.027)
상위 중간소득 (균등화 중위소득 150% 이상~200% 미만)	-0.072**	(0.024)	0.001	(0.001)	-0.068	(0.046)
고소득 (균등화 중위소득 200% 이상)	-0.002	(0.001)	-0.001	(0.002)	-0.209***	(0.061)

주: OECD(2019)에 따라, 중간소득 가구는 가구의 균등화 가처분 소득이 균등화 중위소득의 75% 이상~200% 미만인 가구임. 중간소득 가구를 세분화하면, 하위 중간소득 가구는 가구의 균등화 가처분소득이 균등화 중위소득의 75% 이상~100% 미만, 중위 중간소득 가구는 가구의 균등화 가처분소득이 균등화 중위소득의 100% 이상~150% 미만, 상위 중간소득 가구는 가구의 균등화 가처분소득이 균등화 중위소득의 150% 이상~200% 미만인 가구임.

위 표는 각 소득 집단별로 나누어 분석한 것임. 괄호 안은 표준오차임.

* p<0.05, ** p<0.01, *** p<0.001

출처: “한국복지패널 2007(2차), 2010(5차), 2013(8차), 2016(11차), 2019(14차), 2021(17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자료에 개인 종단 표본 가중치를 적용하여 연구자가 작성함.

04. 분배 인식 개선을 위한 정책 개선 방안

- ◆ **이상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불충분한 소득과 유동 자산 때문에 위험 상황에서의 대응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저소득·저자산 집단에 대해서는 가계 경제의 유동성 확보를 지원해야 함.**
 - 이에,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는 지출 보전 바우처의 지원 확대를 꾀할 수 있을 것임.
 - 현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에 제공되는 농식품 바우처 등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일차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정책적 대안임.
- ◆ **저소득·저자산 집단은 분배 인식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부동산 자산을 보유하더라도 유동성의 제약이 있으면 분배 인식이 개선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
 - 일시적인 위험 상황에서 부채를 지지 않고 대응할 수 있도록 긴급복지지원제도와 같이 단기 유동성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소득지원제도를 확충해야 함.
 - 중장기적으로는 공공부조제도에서 보유 자산을 환산해 포함하는 방식에 대해 재고할 필요가 있음.
- ◆ **자산 축적 가능성이 낮아져 분배의 개선을 체감하지 못하는 중간소득 이상 집단에 대해서는 자산 축적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의 개입이 필요함.**
 - 공적이전소득 확충은 소득 하위 집단의 가처분소득을 늘려 지출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분배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
 - 하지만 OECD(2019)에서도 지적했듯이, 중산층에 대한 소득 이전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하위 중간소득자들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이 빈곤층에 집중된 공적이전소득 보장 체계로는 분배 인식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운바, 사회보장제도의 보장성을 넓힐 필요가 있음.
 - 이와 함께 자산 보유가 가능하도록 주택 자산 보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생애 첫 주택 소유에 대한 재정 지원 확충을 고려해 볼 수 있음.

참고문헌

- 국가데이터처, 각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데이터세트]**, 국가데이터처 MDIS 원격접근서비스. DOI 번호: 10.23333/PN.50150144.V1.3, 10.23333/PN.50150143.V1.3, 10.23333/PN.50150141.V2.2
- 국가데이터처. (2024. 12. 26.). **지니계수 [데이터세트]**. 지표누리 국가발전지표. 2025. 2. 10. 검색, <https://www.index.go.kr/unity/potal/indicator/IndexInfo.do?idxCd=4225>
- 농촌진흥청, 각 연도. 농식품 소비정보 DB 원자료 [미발간 데이터],
- 여유진. (2021). 최근 분배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보건복지 ISSUE & FOCUS**, 제412호, 1-12.
- 이성균, 신희주, 김창환. (2020). 한국 사회 가구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 연구 성과와 과제. **경제와사회**, 127, 60-94.
- 이원진, 김현경, 함선유, 하은솔. (2021). **한국 소득분배 추이와 영향요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세정, 이다미, 신영규, 김지원, 한수진, 김영미, 김수완, 조영민. (2024). **2024년 사회정책 국민 인식조사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해식, 김미곤, 여유진, 김성근, 류연규, 우선희, 김근혜. (2018).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 연구(V): 사회갈등과 사회통합**.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조돈문. (2023). **평등과 공정에 대한 시민의식**. 제1차 발표회 불평등 사회, 국민인식 조사결과 자료집. 노회찬재단; 한국비정규노동센터.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한국복지패널 2007(2차), 2010(5차), 2013(8차), 2016(11차), 2019(14차), 2021(17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 황선재. (2023). 경제적 불평등 인식 추이 및 원인 분석, 2016~2020. **한국사회학**, 57(3), 1-32.
- 황선재. (2025). **한국 사회 주관적 불평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세미나 발표 자료집.
- Davies, J. B., & Shorrocks, A. F. (2000). The distribution of wealth. *Handbook of income distribution*, 1, 605-675.
- OECD. (2019). *Under pressure: The squeezed middle class*. OECD Publishing. <https://doi.org/10.1787/689afed1-en>